

일본의 건설산업정책大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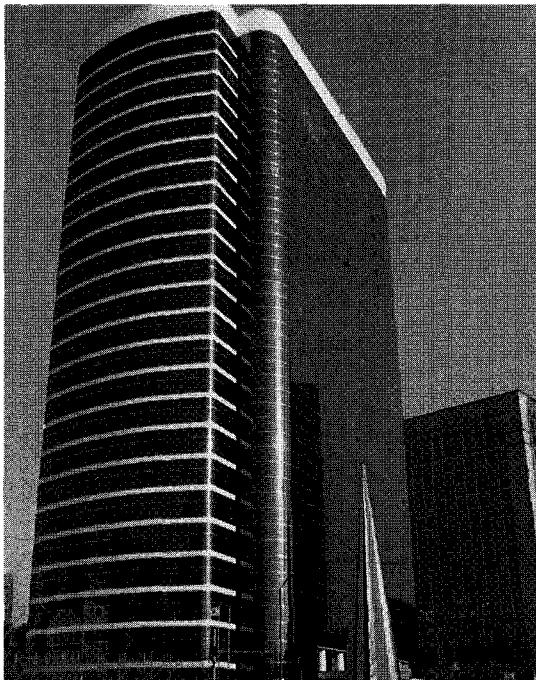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분야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게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 「건설산업정책대강」을 역간했다.

일본 「건설산업대강」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 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하여 이번 12월호로 최종회를 맞는다.



4. 건설산업정책의 3대 기본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시점

목표 - 3

기술과 기능에서 뛰어난 인재가
평생을 의탁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든다.

건설산업활동이 단품수주생산, 옥외이동생산과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마다 달라지는 개별조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공의 기계화 등이 진전될 장래에도 역시 변함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 좋은 물건을 썬 값」에 공급하여 고객, 사회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우수한 기술자 확보, 노동조건 개선을 촉진하여 일하는 사람 모두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되게 한다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은 어차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건설투자가 견실하게 추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10수년간은 그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개선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 하겠다.

그러한 점에서 기술과 관리능력이 뛰어난 기술자와 현장에서 직접 시공기능을 중심적으로 해 나갈 기간적 기능자를 확보 육성하는 대책에 초점을 맞춘 명호가한 인재전략이 요청되고 있다.

• 실현을 위한 대책방향 •

- ① 기술과 관리 능력에 뛰어난 기술자 육성과 확보
- ② 기능의 고도화·복합화에 대응한 기능 노동력의 육성과 확보
- ③ 다양한 노동력의 활용에 의한 노동력의 양적 확보
- ④ 인재배치 효율화 등

(1) 기술과 관리능력에 뛰어난 기술자 육성과 확보

(1) 기본방향

건설기술은 토목·건축공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신소재 및 정보통신, 생화학 등 다른 산업기술까지 포함하여 발전하고 있는 복합기술로서, 건설생산물은 이같은 복합적인 기술의 결합에 의한 집대성이라 할 수 있다. 또 건설산업계는 품질 향상, 안전관리, 비용 관리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공법을 개발하고 생산성 향상과 설계에서 시공, 관리에 이르는 합리화, 효율화를 진전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직접 떠맡고 있는 것이 곧 기술자들이다.

앞으로 일본의 건설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여 가리라 기대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자의

자질 또한 고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특히 근년에는 기술의 고도화,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사회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기술자도 세분화, 분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의식하면서, 서로 조정해 가며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자가 각기 따로 그 능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분야별, 부문별로 분산돼 있는 정보나 기술자 개인이 소유한 정보를 네트워크화하여 정보의 공유화를 기함으로써 기술자가 조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기술자의 자질면에서도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능력 외에 종전보다 더 관리 및 조직통제 등을 적절히 하는 종합적인 관리능력이나 건설공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해질 것이다.

(2) 기술자의 적정한 평가

공공사업 발주 때 적정한 시공업자 선정을 위해 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이 중시되고 있고, 또 동시에 직접 시공을 관리할 기술자나 감리업무를 할 기술자의 자격이나 시공 경험 등에 대한 정보까지 발주측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시공책임은 어디까지나 시공업자가 지는 것이지만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은 공사현장에서의 책임 있는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술자의 책무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중요한데도 기술자의 사회적地位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평가해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자 각 개인의 업적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그에 걸맞는 기술자로서의 책임을 줄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진전, 적정한 시공확보라는 관점에서 기술자 제도의 확충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따라야 한다.

(3) 매력적인 기술자상의 구축

비용과 품질에서 뛰어나고 보다 좋은 건설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기획, 설계, 시공, 관리 등 각 단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우수한 기술자의 확보 육성이 우선 선결 과제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앞으로의 건설산업에 이같은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나 건설산업의 각 단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위상정립과 그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기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장래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기능의 고도화·복합화에 따른 기능노동력의 육성과 확보

(1) 인재전략의 기본방향

요즘처럼 어려운 가격경쟁하에서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르게 개선하기란 하나의 이상으로 실제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좋은 물건을 싼 값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육성이 필수조건이라는 데서, 전에보다 더 기초적인 고용노동조건 향상에 힘쓰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기간기능자의 확보육성을 위한 명확한 전략을 펼쳐 가야 한다

① 앞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정보화 진전으로 기능노동의 내용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걸맞는 「새로운 기능자상」 확립과 동시에 기간적 기능자를 중심적으로 확보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노동시장의 유동화 진전에 맞추어, 단기 고용의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이를 확대해서 어떤 상황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간적 기능자가 기능에 걸맞는 고도

화·복합화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임금수준 개선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기능자의 임금을 개선코자 할 때는 고도한 기능육성, 기능의 공적인 평가, 행정시책에의 반영 등 세 가지 요소를 결합시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같은 시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비단 기간적 기능자만이 아니라 건설업 취업자 전체의 기초적 고용노동조건이 타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노동시간 단축, 안전대책 강화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여 하루 속히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동시에 건설업취업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시 고용인, 일용직 등을 위한 복지제도인 「건설업퇴직금공제제도」에 대해, 공공공사에만이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포함하여, 제도·운용 양면에서 이의 개선에 행정·업계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는 등, 평생을 의탁하는 데 불안하지 않은 제도면의 정비를 도모해야 한다.

(2) 고도화·복합화에 의한 기능의 변화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기계화, 공장생산화 등이 진전되고, 또 원하관계의 역할분담이 변화(종합공사업자의 상류 지향, 시공관리의 전문공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건설기능노동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전망된다. 즉, 각가지 신공법에 대응하면서 현장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ㄱ) 상황의 변화 및 이 상상태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 (ㄴ) 기계의 구조 및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 (ㄷ) 비숙련자에 대한 지시·지도에 관한 능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기능이 필요해질 것이다.

가령, 이제까지는 별로 인연이 없던 대졸자, 여성·고령자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닌 보다 기간적 기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서는 「기능」이라는 언어로 표현되는 일의 내용이,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서 현장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추진시켜 주는 종합적인 일로 변형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같은 복합화·고도화된 새로운 형태의 기능은 하나하나의 생산조건에 임기응변적으로, 또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같은 능력은 전에부터 현장 운영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술」과 「기능」의 틈바구니에 가려 명확하게 위상을 드러내지 못한 영역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능자상」을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기능 내용, 숙련 정도, 필요한 경험, 이같은 기능 획득을 위해 필요한 절차·순서 등을 명시한 기능개발계획(가칭)을 업종마다 직급마다 책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3) 고도한 기능의 육성·공적평가·행정시책에의 반영

앞으로 고도화·복합화한 기능을 건설생산시스템 내에 명확하게 위치를 정립시킴으로써 기간적 기능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그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상호연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같은 시책이 행정·업계의 상호협력 하에 전개되는 가운데서 각 기업이 기간적 기능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실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또 앞으로 기능자를 확보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중학교를 포함한 학교교육 단계에서부터 「물건 만들기」의 열개, 또 그 의미를 이해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커서 「물건 만들기」에 흥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유도한다. 그리고 공업고교 등에 대해서는 기간적 기능자 육성을 위해 실기·실습과목을 충실히하는 등 교육기관에 적극 작용하여 상호협력을 통해 교육내용이 더욱 충실히 해지도록 해야 한다.

① 기능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간적 기능자 육성시스템의 정비

건설기능자의 육성·정착을 위해 현장의 건설기능자를 거느린 전문공사업자만이 아니라 종합공사업자, 지방공공단체 등이 일체가 되어 정비하는 都道府縣 단위의 직업훈련법인 또는 교육훈련을 위한 기금 조성 등에 대해 국가가 지원한다. 이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서는 기간적 기능자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OJT(직장훈련)를 중시하고 그 충실 강화를 기한다.

② 기능에 따른 공적평가제도 정비

기술자(생산현장에 시공계획 작성,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담당)와 일반기능자(현장작업 담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의 자격유형으로서 기간적기능자(기능검정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현장작업관리 담당)를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실시하는 기능심사 중에서 기능진흥을 위해 장려해야 할 것을 建設大臣이 인정하는 제도의 활용을 검토한다.

③ 경영사항심사제도 및 공공공사발주시책에의 반영

경영사항 심사제도에서의 기능자 평가 방법을 검토하는 동시에 직영보수공사에서의 일반기능사 현장상주제도와 같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능자를 공사작업현장에 상주시켜 직접 작업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기능자에 대한 작업지도를 병행하게 하는 제도의 활용을 도모한다.

(3) 다양한 노동력 활용에 의한 노동력의 양적 확보

(1) 기능의 비숙련화·단순화

기능의 고도화·복합화의 반대극에는 인력이 기계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기능이 비숙련화·단순화 돼 가고 있다. 이같은 비교적 단순한 기능 노동력의 폭넓은 활용을 위해, 다양한 노동력의 활용에 의한 노동력의 양적 확보에 중점을 둔 대

책이 필요해진다.

(2) 여성·고령자 활용

건설업에서는 전부터 기능자에게 요구되는 체력 또는 기능을 익히는 데 긴 기기간이 소요되어 여성·고령자가 취업하는 데 큰 장애가 돼 왔다. 앞으로 기간적 기능자로서의 여성 활용에 적극 나서는 한편, 기계화로 기능의 비숙련화·단순화가 진전되면 여성이나 고령자 활용에도 크게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단기 고용이라는 취업조건 개선과 함께 그들이 감당할 노동의 수비령역을 확대하여 보조적 업무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건설생산활동의 중요한 일의를 감당하는 단기고용자로 노동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정비로서는, (ㄱ) 크게 시간 구속을 주지 않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특성을 감안한 취업형태 정비, (ㄴ) 여성의 육아, 병간호,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거나 육아, 병간호 등에서 원활한 직장복귀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치, (ㄷ) 고령으로 일선에서는 은퇴하였으나 기능·경험을 살렸으면 하는 취업의욕을 가진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취업의 장 확보가 필요하다.

이밖에 다양화라는 관점에서는 여성·고령자의 활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대책기본계획¹⁾과의 정합성에 유의하면서 직업소개, 인재파견, 노동자공급사업 등 노동공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근무시간대의 시차 운영등 노동시간을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외국에서 수입한 기능실습생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고용대책법에 의거 국가의 고용대책전반에 대해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계획(현재의 계획은 제7차 고용대책기본계획(1992년 7월 10일 각의결정)(1992년~1996년도 대상))

(3) 의욕적인 자영업자 활용

건설업은 사업자와 노동자의 양면성이 있고, 또한 기능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반적 부분을 담당해 왔던 의욕적인 다수의 소규모 자영업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건설시장에서 전전하게 활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ㄱ) 인재 공급구조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ㄴ) 산업의 활력을 뒷받침해 주는 저변확대로 이어지고, (ㄷ) 자발성·자율성을 불러 일으켜 현장의 사기 진작면에서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진다.

이제까지 건설업의 직접 시공기능은 급여형태를 월급제로 하여, 기업에 의해 안정적으로 고용된 직용노동자가 감당하는 것이 건설생산시스템의 합리화 추진, 고용노동조건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또 사실 이 같은 경영전략을 채용한 실력 있는 많은 전문공사업자가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능자의 직용화, 월급제 도입은 전문공사업자의 자립화와 경영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목표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목표가 과연 「평생을 의탁한 산업역군」에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유일한 목표인지, 또 모든 것이 이 방침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것은 가령 독일의 경우, 고도한 기능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독립자영업주인 마이스터²⁾가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예를 새삼 들 것도 없이, 일본에서도 (ㄱ) 독립자영에 의한 청부제가 업무효율의 향상이나 현장작업에 대한 창의성 발휘를 촉구하는 면이 있고, (ㄴ) 수입면에서도 고용됐을 때의 임금수

2) 우수한 기능과 교육자, 경영자로서의 소양을 가진 자에게 지역의 업계단체가 부여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마이스터가 되면 사용자단체와 산업별 노동조합간에 체결되는 협약에 따라 정해진 임금이 보장되며, 또 독립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입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ㄷ) 건설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동기로서, 안정된 고용노동조건보다 노력에 상응하는 보수, 그리고 물건 만들기에 대한 보람을 드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데서도 분명하다.

따라서, 가치권, 직업권의 다양화에 따른 취업자의 갖가지 의욕에 부응할 수 있는 복선형시스템이 준비돼 있는 것이 노동자확보를 위해서는 중요하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도록 하는 한편, 노동복지와 같은 기초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이제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의욕적인 자영업자층에게도 크게 관심을 두고, 그들의 활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4) 인재배치의 효율화

앞으로 현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종전과 같은 직종구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시공방법 개발이나 이를 감당해 나갈 기술·기능의 결합에 대응한 효율적인 생산시스템검토(건설산업조직의 재편)가 중요 과제가 된다.

이 경우, 안정적이면서 상당한 가동량이 있고 독립성이 강한 작업이나 대규모공사는 전문화·분업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가운데 작업능률, 물질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는 한편, 가동량이 불안정하여 상호 관련되는 일련의 작업이나 소규모공사는 관련공종에서의 다능공화에 의해 전체로서 가동율향상을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다능공화는, 관련 직종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능요소를 습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때는 팀에 의한 다능공화가 관련작업을 한 사람이 일관해서 담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개인 레벨의 다능공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인재의 효율적활용도 전술한 기능개발계획에서 업종별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기능자에서 기술자로의 승진 기회를 넓혀 주거나 노동력의 기업간 유동성을 저해하는 퇴직금·기업연금제도 등의 개선에 힘쓰는 한편, 기계화의 진전에 맞추어 단기고용자의 수비범위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단기고용자에게 보조적인 작업 이상의 역할을 맡겨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 마련도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설생산시스템에서의 노동력의 미래상은, 숙련기능을 발휘하는 기간적 기능자, 비숙련기능을 감당하는 단순공, 여러 형태의 다능공 등을 결합시킨 하부구조가 넓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면서 유연성을 갖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은 곧 개개의 기업 수준에서도, 한 사회내에서 장기계속고용에 의한 기간적기능자와 충동성이 높은 단기고용자 등이 적재적소에서 예사롭게 공존해 가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5. 건설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정책방향

이번에 「21세기를 향한 건설산업비전」으로부터 10년만에 건설산업의 미래상과 건설산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건설산업정책대강」을 책정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계가 90년만의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 개혁,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국제화라고 하는 「새로운 경쟁시대」를 맞이하는 가운데서 건설산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는 동시에 건설산업계의 부정을 불식하여 앞으로의 새로운 경쟁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신과 활력을 되찾게 하자는 데 있다.

앞으로 닥치게 될 「새로운 경쟁시대」는 기술과 자본의 축적 외에도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력이 요구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 새로운 경쟁시대는 어느 의미에서는 기업간 격차가 현재화 되는 시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타기업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노력과 연구

를 축적해 나가는 기업에게는 경쟁의 장을 통하여 발전기회를 움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번의 정책대강에서는, 개별 기업이나 건설산업계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앞으로의 산업

을 둘러싼 경쟁환경에 대해, 경제사회 프레임 그리고 제도의 기본 틀을 밝혔다. 그리고 새로운 경쟁시대에서의 정책기본방향으로서, 각 기업의 경쟁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을 한사코 줄여 나가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 정책의 기본방향 일람 ◇

정책과제	구체책	전 개 방 향
1. 불량부적격업자의 철저한 배제	① 폴력단체의 배제 ② 경영사항심사의 이상치 심사 ③ 기술자의 전임제 상시 점검	폴력단체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정기적인 정보교환으로 건설업 허가·갱신 및 공공사업 자격 심사단계에서부터 배제를 추진. 완성공사고의 물타기 등으로 경영사항심사신청을 허위로 하는 불량부적격업자배제를 위해, 데이터의 이상치 체크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경쟁의 장 만들기를 추진. 기술자의 전임제 추진을 위해, 기술자의 현장 전임제를 상시점검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급히 구축.
2. 소프트분야의 금전적 평가 명확화	① 기술제안종합 평가방식 도입 ② VE방식 도입 ③ CM업무방향에 대한 검토 ④ 소프트의 평가 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	기술자요소가 큰 대형공사에 대해, 가격경쟁이외의 요소를 기미한 경쟁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기술개발이 현저한 분야에서는 중앙건설심의회건의에 따라 기술제안종합평가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VE제도에 대해서는 수주자가 축적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적극 끌어내는 동시에 빌주자에게도 구축물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지 않고 공사비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최신기술도 데이터 축적이 진전되는 이점이 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시스템의 일환으로 VE방식 채용이 가능하도록 VE도입을 위한 규정제정, 관련제도와의 조정 등을 조기 검토한다. 기술력을 활용한 빌주자지원시스템인 CM방식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업 선정, CM업무에 대한 금전적평가, 빌주자와의 역할분담등에 대해 조속히 검토한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산업의 독립분야로서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 CM업무에 대한 수요, CM사회 등 CM업무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추진한다. 앞으로의 건설산업에서는 주어진 것을 제대로 만드는 일 말고도, 무엇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데 따라 커다란 가치가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소프트분야 가치가 커지는 데 주목하고, 건설산업계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소프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건설생산시스템의 방향에 대해 필요한 검토·지원을 한다.
3. 기업활동 방향 설정의 기본틀 구성	① 기업평가에 대한 구상 재검토 ② 건설업법의 기본 방향 재편 ③ 원도급책임의 합리화 ④ 평준화 추진	현재 공공발주를 위한 기업평가에서는, 완성공사고가 종시되는 동시에 매년 적정한 이윤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명에서는 수주기회의 균등배분이라는 관점에서 합병은 불리하게 다루어질 공산이 크다. 타산업에서 자본조달이나 영업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산화·합병·기업제휴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적정이윤확보를 위해 결원 처리에 의한 대담한 재무제질개선도 하기 어려운 실태도 있다. 따라서 불량부적격업자가 끼어들 수 없도록 제동을 걸고,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업평가의 방향에 대해 재검토한다. 현행 건설업법에서 28업종에 대한 기본틀은 하나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기술은 보유하면서도 복수허가가 요구되는 등 부담을 주는 면이 있다. 또 이 점이 업계의 세분화로 이어져 디능공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허가구분에 대해 필요기술의 체계화 시점에서 재편성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자유로운 계약범위를 넘어 원도급이 부담하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소비자(발주자)보호, 피해자구제 시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책임담보 장치에 대해 검토한다. 공공발주의 평준화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의 비용 저감, 품질확보 관점에서 큰 과제일 뿐 아니라 건설산업계의 경영쇄신, 구조개선이라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사 피크시의 대응을 위해 건설산업계는 잉여인원을 거느리거나 경영안정화를 위해 중충적 하도급구조를 취하게 되어 밀단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단년도예산이라는 제도적 제약은 있으나 제도의 운용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조속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장기국채, 장기현채, 장기시정총채의 적극활용, 공기·준공 시기의 조정, 조기 발주, 지방단독사업의 4~6월의 환절기 활용, 의회승인금액 인상 등에 대해 재정당국의 이해를 구하며 검토를 추진한다.

수 있는 「적정한 경쟁을 위한 장 만들기」와, 개

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

정책과제	구체책	전 개 방 향
4-1. 인재 교육추 진(기업 활동의 공통기 반 조성)	① 기능자 육성 시스템 재구축	노동집약적인 건설산업에서 기능자는 최대의 생산기반이다. 기능자의 육성에 대해서는 노동성의 「직업기능개발촉진법」에 의한 체계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근대의 기술진보 속에서 새롭게 요청되는 기능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이에 의해 독자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기능자를 확보육성한다는 면에서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기업활동의 「공통기반」으로서 지역수준에서, 더 나아가 업종횡단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한 전국 수준의 기능자교육시스템 형성에 건설산업 계와 행정이 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한다. 건설산업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구좌개설, 풍 입고교등에서의 기간적기능자양성을 위한 실기·실습과목 충실회동, 학교교육과의 연계강화를 도모한다.
	② 기능재평가와 기업평가, 발주에 반영	기술자와 일반기능자를 연계시키는 역할(기능의 「기술화」)을 감당할 수 있는 기간적기능자를 제3의 자격유형으로 정착시켜 이를 기업평가, 발주에 정확하게 반영시키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4-2. 정보화 추진 (기업활동의 공통기반 조성)	① 건설산업계의 정보기반조성	건설산업전체에서 정보코스트를 저감시키고 생산시스템의 효율화 촉진이 품질향상, 코스트다운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많고 건설현장이 많은 건설업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앞으로 정책으로서도 CAD시스템발전, EDI촉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표준코드, 룰의 정비를 계속 촉진시키는 동시에 이의 도입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보화를 적극지원한다.
	② 건설산업계의 정보기반(조성)	또한 제외국, 타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발주자·수주자 협력하에 정보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발주와 연계한 CAD, EDI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5. 중견·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① 전문성 발휘를 위한 기업평가	완성공사고 중심인 기업평가는 전국적인 경영력이나 전반적인 기술자원에서 미흡한 중견·중소기업이 대형사에 비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그러므로 건설산업기술의 전문화·진전에 대응하여 현재의 기업평가를 세분화해서 특정부문에 경영지원을 집중시켜 대형사와의 경쟁이 가능한 기업이 성장하기 쉬운 평가 작성률을 검토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설비업계를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리발주에 대해서도 타업종에서 전문일괄과 같은 형태로의 전개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생각된다.
	② 현지기업의 시공력 평가·활용을 위한 기본틀 만들기	현지기업은 자신이 보유한 시공력을 가지고 지역정비·유지보수·방해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평가에서는 전국 대형사의 종합적 평가와 겨룰 수 없어 경쟁기회를 놓치는 수가 많다. 이 점이 역으로 지역의 현지공사에 대한 전국업자의 배척, 현지조건 설치에 대한 강한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조건(지점, 영업소)대신 지역 우량 기업의 지역에서의 기술력, 시공력이 적정평가되고 대형사와 같은 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드는 것도 한가지 방향으로 검토한다.
	③ 전문공사업의 자립을 위한 장치 마련	전문공사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적인 기술력·시공력평가 방법으로는 기술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장치도 없어 원도급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에 따라 가격경쟁을 강요당하는 경향이었으므로, 기술과 경영에서 뛰어난 기업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원하관계를 적정화하여, 전문공사업자가 기술·기능과 경영력 제고로 자립하기 위한 환경조성이이라는 관점에서도 전문공사업의 기술력·시공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 더 나아가 금융정책이나 사업협동조합의 활용과 같은 종합적 진흥책, 경영관리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검토한다.
	④ 우량 중견·중소기업이 대형 공사에 도전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완성공사고, 공사실적 중시의 기업평가, 발주표준, 지명기주 하에서는 우수한 중견·중소기업이 투명한 형태로 보다 큰 공사에 도전할 기회가 적다. 이것이 지명을 둘러싸고 각기업이 발주자와 불투명한 형태로 흥정하게 된 동기였다는 지적도 있다. 앞으로 시공성적이 우수한 기업은 일정 조건하에서 보다 상위 공사에 적극 도전할 기회를 주고, 기업의 순위 비점은 건전한 산업계육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공사의 시공성적 평가기준 객관화와 데이터베이스화를 촉진한다. 또 이를 근거로 우량한 기업이나 기업팀이 희망에 따라 상위 공사에 적극 도전할 기회를 기질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검토한다.
	⑤ 우량중견·중소기업의 체질 강화	새로운 경쟁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건설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견·중소건설업의 체질강화, 경영기반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이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요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업활동, 합병 등에 대한 지원을 한다.

는 「산업발전을 위한 공통된 기반조성」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한편, 개별 기업이나 건설산업계의 미래상,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앞으로 경쟁시대의 변화는 극심해질 것이고, 건설산업계 내부에서의 사정없는 경쟁이나 타산업으로부터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각자의 미래상은 스스로의 경영판단으로 그려야 할 시대가 되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제부터 행정은 정책대강에 제시된 「적정한 경쟁을 위한 장 만들기」를 위하여 건설산업계만으로도 53만사, 64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현재의 건설조직과 조정을 시도해 가면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 건설산업계는 이 틀 안에서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걸고 진로를 정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남겨진 금세기의 마지막 5년, 더 아나가 21세기초에 걸쳐 건설산업은 「새로운 경쟁시대」라는 시련을 헤쳐 나가야만 한다. 이는 피할 길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건설산업이 짊어진 「건설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본래 역할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히려 이제부터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창조를 목표로 질 높은 건설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만 하는 시대이다. 국민에게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제공하는 가운데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다지고, 「기술과 경영에서 뛰어난 기업」이 자유롭게 발전하는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궁지와 희망이 넘치는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같은 뜻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건설산업에 몸담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하나의 결전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대담한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과제에 온몸으로 부딪치며 맞서 나가야 한다.

정책과제	구체책	전 개 방 향
6. 건설산업에서의 품질 향상	①기업평가 공표	기업의 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 현재 경영사항심의결과는 공적빌주기관 외의 공표는 않고 있으나, 1993년 12월 중앙건설업심의회 건의에 따라 널리 소비자(빌주자) 보호 추진이라는 입장에서 기업의 기술력·사공력·재정에 대해 전문공사업을 포함한 정보 공개 범위 및 방법에 대해 검토해 나간다.
	②품질보증에 대한 기본틀 만들기	현재, 건축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건설기준법으로 최저한의 체크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품질의 우수함을 계속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고수준의 규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ISO 등의 국제규격운동과 겸사체제의 확립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간다. 또, 현재의 건설공사에서의 하자담보보증은 원칙이 1년인데, 국민으로서 최대투자인 건설공사에서는 너무나 짧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설계·감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보증에 대한 규정도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태이다. 앞으로는 업무의 내용에 따른 하자담보보증의 규정방향에 대해 검토하며, 아울러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건설산업계의 독자적인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다.
7. 건설산업의 자구노력 지원	구조개선전략프로그램 추진	행정으로서는 건설산업계가 자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 중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 「구조개선추진프로그램」의 중점과제, 추진시책으로서 멀리적으로 열거하여 과거 6년간 광범하게 대응해 왔으나 지금 돌이키면 반드시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도 앞으로 책임하게 될 구조개선 전략프로그램에서는 ①현행 프로그램에 제시된 중점과제 가운데 새로운 경쟁환경하에서 건설산업계 전체가 최중점과제로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성격부여, ②사업의 완결성 등을 감안하여 목표를 2000년으로 하는 5년간의 프로그램으로 하며, ③지방공공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관계기관 상호간의 역할분담·협력하여 종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자주적인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
8. 홍보활동 강화	홍보활동 강화	시민들에게 널리 이용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건설중인 현장 사진·설계도·감동적인 애피소드·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전시 코너를 설치하여 국민에게 「건설산업의 얼굴이 보이는」 듯한 홍보활동을 한다. 건설관련 도서관·박물관 건설
	건설산업조직의 분석	대학에 대한 강좌기부를 통해 건설산업조직의 학문적 연구
	해외 교류	건설부문 관련 해외유학생수용, 해외파견에 의한 인적교류